

전북특별법 특례, 정책으로 구체화

1분기 특례 실행 보고회
도, 특별별 이행 상황 점검
총 42개 주요 특례 중심
84건 관련 사업 확대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첫 분기 실행을 종합 점검하며, 특례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중, 올해 53개 특례가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고, 22개 특례는 실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 가운데 총 42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약 9,400억원 규모, 84건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 지원단'의 출범과,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개소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지는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설편' 등 다양한 특례 기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법적 기반도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도는 특례 실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56건 중 46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도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어, 향후 후속 사업 연계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특례별 공모 대응 및 사업화 전략을 강

화하고, 재정지원과 지구지정, 관련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육아용품 구입비 15% 세액공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최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포인트 낮다.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한다.

출생률 제고와 시급한 상황에서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 등 양육 관련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양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상황근무자 대상 초빙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임야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일과 16일 양일간 상황근무자 65명을 대상으로 초빙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날씨누리·방재기상정보시스템·원디날씨 등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 자료를 수집 방법 △기상자료를 재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 △실무 중심의 사례와 활용법 △119 신고 접수 시 소통 능력과 상황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등으로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농어민 현안 해결... 민주 도당 농어민위원회 발대식

민생 회복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주시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발대식을 열고 농어민 현안 해결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 노창득 농어민위원장, 한능연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이훈구 회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노창득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와 기후 위기,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어민들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주시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발대식을 열고 농어민 현안 해결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대선에 농업정책들이 대선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농어민과 지자체 간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정

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농어민 권익 보호와 민생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농어민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만호 기자

어촌계 주요 현안 논의... 민주 윤준병 의원, 어촌계장연합회와 간담회

농어업 민생탐방 일한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일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전국 어촌계장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어촌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바다 낚시배의 어류 채취행위 규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예산 회복, 전국 어업인 회관 건립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특히, 낚시배로 인한 양식장 피해 증가와 어종 남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출항 금지, 쿼터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어촌계장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전국어촌계장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어촌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윤 의원은 앞으로도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

을 약속했다.

이 간담회는 어촌계의 발전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관리 대책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15개 구·시·군 선관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병철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준비 기간도 짧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선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흠결 없는 선거관

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 절차의 투명한 공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 △사이버 보안 강화 △가짜뉴스 및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신속 대응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의 공정성 확보와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여론조사 환경 조성을 위해 언론사와 정당을 대상으로 한 윤의사항 안내, 여론조사 결과 등록 및 투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ESG 경영 실천 앞장서야”

김이재 도의원, ESG 경영 실천 조례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은 지난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나 전북자치도청에만 ESG 경영 도입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탄소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부 및 봉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임법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의회 조직 구성원간 평등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

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ESG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의회는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ESG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작은 실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ESG 경영이념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행정의 전 분야에 ESG 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체계화 위한 근거 마련

임종명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 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종명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을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와 계획 △활성화 교육 실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디지털문화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며, “애포커거나 잊혀진 역사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문화유산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남계리 천주교 유적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윤수봉 도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14일 “완주 남계리 천주교 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초남이성자권역 천주교유적 국가사적 현지심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들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완주군 천주교 유적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며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주군 천주교 유적지는 사회적 공공재로 봐야 하며, 한국의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사적 지정 이후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 등의 유적이 발견된 초남이성자권역(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69-65 일원)에 대한 국가사적 현지심사에는 권요안 도의원과 심사위원, 국가유산청·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천주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곳으로 학술적·천주교사적 가치가 높고, 평등과 새로운 사회를 추구한 신앙공동체의 실천적 사랑과 헌신이 녹여져 있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 촉구 서명부 해수부에 전달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14일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방문해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에는 새만금특위 김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우종삼 부위원장, 송미숙·양세웅·서은식 의원이 함께했으며, 서명부는 해양수산부 항만국항민정정책과에 공식 전달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위는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항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이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체계의 무역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은 단순한 항만정책을 넘어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전달된 서명부는 총 7권의 책자로 제작됐다. /군산=이재훈 기자